

민주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권리당원 영향 주목

광주 11만·전남 20만...예상과 달리 격차 확대 통합 선거인단 구조...조직력·투표율 핵심 변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권리당원 규모가 당초 예상과 달리 광주는 줄고 전남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권리당원이 하나의 선거인단으로 묶이는 통합 경선 구조인 만큼, 지역간 당원 규모 격차가 실제 경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등에 따르면 이번 경선에서 투표권을 갖는 권리당원은 광주 약 11만2000여명, 전남 약 20만여명 등 총 31만여명 규모로 파악됐다.

광주시당은 권리당원 선거인단이 11만2079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으며, 전남도당은 "20만명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역 정치권이 그동안 예상해 온 광주 약 13만5000여명, 전남 약 18만명과 비교하면 흐름이 크게 달라진 수치다.

광주는 약 2만명 줄어든 반면 전남은 약 2만명 늘어나면서 두 지역간 권리당원 격차도 기존 약 5만명 수준에서 8만~9만명 수준으로 확대됐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이번 경선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과거처럼 광주와 전남이 각각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 아니라 단일 권리당원 선거인단에서 합산 투표로 경쟁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남 권리당원이 광주보다 약 9만명 가까이 많은 구조가 형성되면서 전남 조직 기반을 가진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전남 내부에서도 동부권과 서남권 등 지역별 정치 지형이 뚜렷하고 후보별 기반 지역 역시 갈려 있는 만큼 전남 권리당원이 하나의 표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광주 역시 권리당원 규모는 줄었지만 도시 지역 특성상 투표 참여율과 조직 결집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규모 열세를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

기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권리당원 확대 과정에서 후보별 조직 기반을 중심으로 당원 가입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단순한 지역 규모보다 실제 투표 참여율과 조직 동원력이 경선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본경선과 결선투표에서는 권리당원 투표와 함께 일반 여론조사가 함께 반영되는 만큼 권리당원 규모 격차가 최종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후보 측 관계자는 "권리당원 규모에서 광주와 전남 간 격차가 예상보다 크게

확인된 만큼 후보별 지역 기반에 따라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조직적으로 가입한 권리당원은 향후 후보 단일화나 지지 선언 과정에서도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은 예비경선이 19~20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되며, 본경선은 당원 50%와 일반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4월 3~5일 실시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는 4월 12~14일 치러질 예정이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광주 시민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광역의원 정수 조정 논의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광주시당

“6·3지선서 뺏을 ‘광주시의원 정수’ 늘려야”

광주국회의원들, 국회 회견서 정개특위에 촉구 김문수, 현행 선거구서 2인 뽑는 법안 대표발의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8명은 1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 이전에 광주시민의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광역의원 정수 조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광주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 의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장치인데, 광주 시민의 표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불균형 구조를 그대로 두고 통합특별시가 출범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회 정개특위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현재 광주의 인구는 139만명인데, 광주 광역시의원은 23명이다. 반면 전남은 인구 177만명에 전라남도의회이 61명이다. 인구수 차이는 38만명에 불과한데 광역의원 수가 2.7배나 차이가 난다.

이 구조가 통합특별시의회에 적용되면 광역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광주의 경우 약 6만9000명, 전남은 약 3만2000명으로 격차가 크다.

하나의 통합특별시 내에서 각 선거구별 인구 격차가 커지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표의 등가성 원칙에 따라 인구 편차를 3대 1로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해왔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1986년 행정적으로 분리된 이후 4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적 통합은 수도권 일국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반드시 검토할 중대한 과제는 바로 통합특별시회의의 구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간 대표성 불균형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개특위에서는 광주시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해 △기존 선거구에 정수를 늘려 중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방안 △기존 선거구를 통폐합해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방안 △지역구별 비례대표제를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인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이와 관련해 통합특

별시의 광역의원 선거구를 기존과 동일하게 하는 대신 광주의 경우 광역의원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광역의원 정수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근거를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앞서 광주와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광주시당, 전남도지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행 광역의원 정수로 통합을 진행하되, 향후 광주시의원 증원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해 결정”하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22조와 부칙 제3조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를 산정할 때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고, 중전 광주시와 전남도의 인구비율과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 진보교육감 후보단일화 ‘내홍’ 김해룡 후보 “장관호 단독 찬반투표 당장 중단해야”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전남광주특별시장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남 민주진보 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이 갈등 속에 흔들리고 있다.

경선 절차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면서 후보 사퇴와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단일화가 파행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김해룡 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사진)은 16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 민주진보교육감 도민공천위원회(이하 전남공천위)가 추진 중인 장관호 후보 단독 찬반투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특정 후보만을 대상으로 찬반 여부를 묻는 방식은 사실상 추대와 다를 바 없다”며 “민주적 경선 절차를 훼손하는 결정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후보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단일화 원칙을 무시한 채 공천위가 새로운 방식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 측은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여론조사 90%와 도민공천위원 10% 반영 방식이 기본 틀로 합의됐고, 세부 사항 역시 상당 부분 조율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점수 산정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중단됐고, 이후 공천위가 예정된 토론회 일정까지 취소하면서 협의가 더 이상 전진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공천위가 장관호 후보를 단독 대상으로 하는 찬반투표를 추진하면서 갈등이 더욱 커졌다. 김 후보는 “기본 합의와 다른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필연적 경우 가져본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민주 전남도당, 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 심사 21일부터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 순차적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경선 후보자 심사에 착수했다.

16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17일부터 기초단체장 등 경선 후보자 심사를 벌여 이르면 21일부터 경선 후보자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는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선출하되 1위 후보자가 50% 이상 득표를 하지 못하면 상위 2명으로 압축해 결선 투표를 치르기로 했다.

후보가 5명 이상인 경우 예비경선을 진

행한다.

경선 후보 발표는 기초단체장부터 순차적으로 할 예정인데, 검증이 덜 끝났거나 의혹이 제기된 후보들은 추가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당에 등록된 권리당원은 20만여명으로 작년보다 다소 늘었다.

도당 관계자는 “경선 후보로 등록된 인사를 모두 참여시켜 심사를 진행하지만, 일부 문제가 제기된 후보의 경우 컷오프된 1차 발표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며 “공정한 경선 진행을 위해 당원 명부와 구체적인 숫자는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심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신안·진도해역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지정 7.3GW...기후부, AI·데이터센터 연계 산업 생태계 조성

전남도가 신안과 진도 해역에 총 7.3GW 규모의 초대형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확보하며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전남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심의·의결해 발표한 전남지역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재생에너지 기반 미래 산업 구조 전환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진도 해역 2개 단지 3.6GW가 신규 지정되고, 신안 해역은 3.7

GW 규모로 확대되면서 전남은 총 7.3GW 규모의 대형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확보하게 됐다.

신안 3.7GW와 진도 3.6GW 단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로 조성될 예정으로,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로 접어드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전남도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군작전성 문제, 어업과의 공존, 전력망 구축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를 이어왔

다. 특히 오는 28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기존 제도 체계 안에서 대규모 단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으로 전남은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비롯해 글로벌 풍력기업 및 지자체 산업 유치, 전력망 기반 에너지 산업 육성, AI·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 기반 첨단 산업 유치까지 연계한 산업 생태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전남도는 지정 과정에서 제시된 군작전성 협의의 등 조건 사항을 관계 부처와 군당국과 협의해 연내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지역과 합

리적으로 공유하는 구조를 마련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에너지 산업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은 전남이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풍부한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과 AI·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유치해 지역 산업 구조의 전환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에 맞춰 신규 예비지구 발굴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속 추진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1면 ‘유쾌한 홍보’서 계속

영상에서는 한 직원이 밧줄을 당기며 “갑니다. 공원에 다와 갑니다”라고 말하자 정유홍 홍보팀장이 “아이 잡아당기지 마. 슬로우조깅은 천천히 뛰어야 한다 말이야”라고 말하며 운동의 장점을 설명한다. 이어 “네 이놈, 네게 달리기를 능멸한다”는 대사가 등장하고, 정 팀장은 ‘슬로우조깅단’이 적힌 웃을 건네며 참여를 권한다.

영상 하단에는 슬로우조깅단 모집과 활동 장소(5·18기념공원, 풍암생활체육공원, 염주근린공원 등), 운영 시간이 안내된다. 해당 영상 조회수는 16일 오후 기준

3365회를 기록했다.

누리꾼 반응도 긍정적이다. 댓글에는 “호랑이 CG가 원작을 이겼다”, “홍보 영상에 이렇게 웃길 줄 몰랐다”, “영화를 보러 가야겠다”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자치구들은 이런 콘텐츠가 딱딱한 행정 안내보다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홍보 방식으로 보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정확 홍보 방식을 고민하다가 인기 영화 대사를 활용하지는 아이디어가 나왔다”며 “주민들이 재미있게 영상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행사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